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32
----------	------

발의연월일 : 2025. 2. 18.

발 의 자 : 윤준병 · 김한규 · 김태년
박지원 · 박홍배 · 박희승
정동영 · 정성호 · 조계원
조정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 후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

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운영 방안을 법제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함.

또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는 교육부에 보고 및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

제44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44조의3에 따른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제4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육공무원의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 수행 지속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판단 결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휴직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판단 결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활 또는 치료 등 지원사항
 4.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복직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육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학생 안전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준하는 휴직기간을 적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휴직을 명한 교육공무원의 재활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이 복직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교육감은 위원회가 복직하려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복직 및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복직 및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 재활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4. (생략) <u><신설></u>	제10조의4(결격사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u>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u><신설></u>	제44조(휴직) ① ----- -----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제44조의3에 따른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u>

② ~ ⑤ (생략)

<신설>

하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질환교육공무원심의회
원회) ①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
능한 교육공무원의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
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육공무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
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 수행
지속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판단 결과 직
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휴직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판단 결과 직
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활
또는 치료 등 지원사항

4.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휴직한 교육공무원
의 복직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제2호에 따
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학생 안전 및 교육 환경을 고
려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휴
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제
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준하는
휴직기간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휴직을 명한
교육공무원의 재활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산하
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이
하 “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휴직한 교육
공무원이 복직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교육감은 위원회가 복직
하려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복

직 및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복직 및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 재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